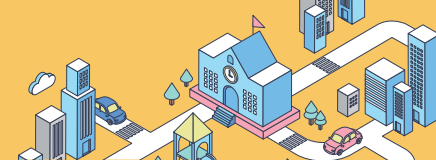


2022

국민불편 법령정비 사례집





목차 | Contents

2022 국민불편 법령정비 사례집



PART 01

이야기로 꾸민 정비사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관련 행정처분 면책규정 도입 06
- 운전면허증 갱신, 재발급 신청서 항목에 등기우편 수령 가능여부 추가 10



③ 국민 불편 해소

- ③-11.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근거 마련 30
- ③-12.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예비타당성 면제 31
- ③-13. 취업지원의 유예 횟수의 예외적 확대 필요 32
- ③-14. 부정한 보험급여비용에 대한 부당이익 징수의 의무화 33
- ③-1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 청년의 범위 확대 34
- ③-16. 자공해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 정비 35
- ③-17. 국가가 직접 수소충전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36
- ③-18. 공유수면 점용료 · 사용료의 산정기준 합리화 37
- ③-19.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행정규칙이 아닌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규정 38
- ③-20. 소형어선에 비치하는 '검사증서'의 전자적 발급 도입 39
- ③-21. 사립학교법에 따른 이사회 회의록 공개 청구 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완화 40
- ③-22. 핵연료물질의 정련사업 등의 신고사항 확대 41
- ③-23.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에 따른 회계서류의 공개 방법 확대 42
- ③-24. 세대원 중 일부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표시된 주민등록표 등본 교부 43
- ③-25. 구조기관에서 작성하는 서식 내용을 국민 편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정비 44
- ③-26. 운전면허증 갱신 · 재발급 신청서에 등기우편 수령 항목 추가 45
- ③-27. '석면조사기관 신규 등록을 위한 정도관리 상시화 46

④ 법령의 명확화

- ④-28. 일반임기제군무원으로 재직할 기간을 일반군무원의 재직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명확화 50
- ④-29.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시 영치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확화 51
- ④-30.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의 경우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의제 대상이 대지조성사업에 한정됨을 명확화 52
- ④-31. 골재채취허가 변경승인 요건 완화 53
- ④-32. 노상주차장 폐지 의무 명확화 54
- ④-33.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인정요건 구체화 55



PART 02

일반정비

① 국민 안전 보호

- ①-1. 수중레저사업 종사자 안전교육 면제요건 명확화 16
- ①-2. 비상음향장치 기준 개선안 17
- ①-3. 수렵면허의 제한 사유 명확화 18
- ①-4. 주택건설공사 수급인의 자격 등에 대한 감리자의 의무적 확인의 근거 마련 19
- ①-5. 자체방호계획의 수립 시 통합 대상인 방호인력의 범위 합리화 20
- ①-6. 조중교육증명을 갖춘 사람의 의미 명확화 21

② 사회적 약자 보호

- ②-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확대 24
- ②-8. 주소득자가 부소득자와 이혼한 경우를 긴급복지지원 대상에 추가 25
- ②-9.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 26
- ②-10. 전세 사기 방지 등을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 등의 열람 가능화 27



④-34.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여부의 판단 기준인

- “연면적”의 의미 명확화 56
- ④-35.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 판단 기준일 명확화 57
- ④-36.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관청의 명확화 58
- ④-37. 토요일 등이 공람기간에 포함될 경우 공람실시 여부 명확화 59
- ④-38. 휴게음식점 등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의 설치 허용 범위 확대 60
- ④-39.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 가능한 농산물재배사의 면적 기준 명확화 61
- ④-40. 체육시설업 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부동산 소유권이냐 타인 소유 부동산의 사용권 상실을 명확화 62
- ④-41. 산림경영계획 인가신청 주체 명확화 63
- ④-42.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정부관리기업체”의 범위 구체화 64
- ④-43. 공유수면 점용료 · 사용료의 조정 대상 구체화 65
- ④-44.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인접 대지경계선의 범위 명확화 66
- ④-45.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주택 소유 요건 규정 명확화 67
- ④-46. 재난 및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 총괄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부과 여부 명확화 68
- ④-47. 「환경분쟁 조정법」상 조정의 조서 작성 절차 명확화 69
- ④-48.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임기 명확화 70
- ④-49.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명확화 71
- ④-50. 잔여폐기를 처리주체 명확화 72
- ④-51. 혈액 채취 방식의 음주 측정 규정 정비 73
- ④-52. 토지이동, 건축물 사용승인의 온라인 신청 관련 법 규정 명확화 74
- ④-53.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 명확화 75
- ④-54. 참전사실 확인통보서 개선 제안 76
- ④-55. 공칭작동온도에 따른 감지기의 색상 표시 명확화 77
- ④-56. 의무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업무정지처분의 가중 기준 명확화 78
- ④-57. 수사기관에 대한 부정청탁 신고 송부 제도의 법률상 근거 마련 79
- ④-58. 감염병 구분 기준 변경에 따른 「학교보건법 시행령」정비 80
- ④-59. 「화학물질관리법」의 종전 제명을 인용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정비 81

⑤ 법체계 정비

- ⑤-60. 벌칙 규정이 적용되는 공무원 의제 범위 명확화 84
- ⑤-61.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는 표현 개선 85
- ⑤-62. 「경찰공무원 임용령」상 존재하지 않는 법조문 인용의 오류 정비 86
- ⑤-63.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상 같은 의미를 가지는 용어에 관한 다른 표현 정비 87
- ⑤-64. 고시로 규정된 안전검사 · 측정 관련 행정처분의 기준을 부령으로 상향 규정 88
- ⑤-65. 폐지된 개념인 ‘월차 유급휴가’의 용어 정비 89
- ⑤-66. 지방행정재제 · 부과금 행정처분의 당사자 이외의 제3자 납부 조문 신설 90
- ⑤-67.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가목의 “영업자”의 범위 명확화 91
- ⑤-68.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도 개선 92



PART 03

기획정비

⑥ 기획정비

- ⑥-69. 청년 지원 등 공정·상식에 부합하는 법령 정비 96
- ⑥-70. 개인정보 침해개선 법령정비 102
- ⑥-71.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 108
- ⑥-72. 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법령정비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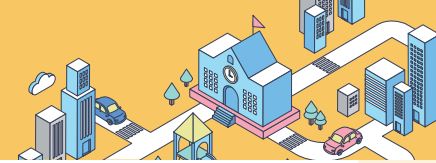


2022 국민불편 법령정비 사례집

이야기로 꾸민 정비사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관련 행정처분 면책규정 도입
- 운전면허증 갱신, 재발급 신청서 항목에 등기우편 수령 가능여부 추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관련 행정처분 연책규정 도입



간만에 초등학교 동창인 윤호에게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 어릴 적부터 게임을 좋아하던 윤호는 결국 피시방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피시방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 되었고, 윤호의 피시방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영업에 큰 타격을 입었다. 다행히 지금은 코로나 19로 인한 거리두기도 완화되었으니 고생이 줄었으리라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윤호를 만나러 나갔다.

그러나 퇴근 후 근처 삼겹살집에서 만난 윤호의 얼굴은 지난번보다 훨씬 수척해져 있었다.

“윤호야, 또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야, 진짜 힘들다!”

“무슨 일인데 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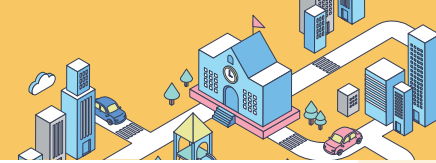
“개들이 고등학생인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니!”

사정인즉 이러했다.

미성년자는 밤 10시 이후 피시방 출입이 금지되어있다. 그런데도 늦은 밤 출입하려는 학생들이 있었던 모양이다. 그럴 때마다 윤호는 학생들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정중히 돌려보내곤 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한 무리의 손님들이 들어왔고, 윤호는 늘 하던대로 신분증을 검사하고 입장시켰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행정처분을 받게될 입장이 되었다고 한다. 알고보니 학생들이 피시방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위조한 것이었다.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겁이 난 윤호는

“그래 검사를 소홀히 한 나도 잘못이지만, 신분증 위조까지 할 줄은 정말 몰랐다고, 코로나 끝나고 이제 좀 살 수 있을까 했는데 말야.”라며 하소연했다.



‘그래, 그래서 날 찾아왔구나.’

그것이 청소년 범죄 관련 법률상담을 하는 날 찾은 이유였다.

나는 윤호의 등을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다..

“윤호야! 이제 법이 바뀌었다. 너한테 고의성이 없고, 학생들이 위조신분증을 만들어서 사용했으면, 네 행정처분은 감면될 수 있어.”

“정말?, 감면될 수 있다고?”

“그래 임마, 그러니까 힘내!”

“고맙다! 더 알아볼게. 정말 고맙다! 오늘은 내가 쓴다!”

“됐다! 나중에 감면되면 그때 사!, 이모 여기 삼겹살 추가요!”

이제야 윤호의 얼굴에 온기가 돌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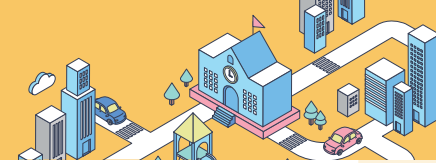
이렇게 개선됩니다



현재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과,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에서는 식품접객영업자 또는 소매인(담배판매업자)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산업법」에 따른 영업시설의 경우, 청소년이 위조신분증을 사용해 출입제한 시간에 출입했을 때와 같이, 영업자의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처분의 면책규정이 없어 자영업자들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자영업자들에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생계와 직결된 중대한 문제인 것을 인지하고, 청소년들이 위조신분증을 사용하여 출입제한시설을 이용하는 등 영업자의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감면할 계획입니다.



02

2022 국민불편 법령정비 사례집

운전면허증 갱신, 재발급 신청서 항목에 등기우편 수령 가능여부 추가



시장에서 작은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정우씨.

항상 밝은 모습으로 손님을 맞기에 인기가 좋다. 아침에 트럭을 몰고 과일 공판장까지 나가서 좋은 물건을 직접 고르고 사 오는 정우씨는 과일 품질에 대한 자부심도 크다. 오늘 아침 과일을 트럭에 싣고 계산을 하던 정우씨의 지갑에서 면허증이 바닥에 떨어졌다. 떨어진 면허증을 줍던 정우씨는 적성검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혹시라도 기간을 놓치면 트럭운행에 문제가 될지 모른다고 생각한 윤호씨. 오늘은 손해를 감수하고 가게 문을 닫고 적성검사를 받으러 갔다.

도로교통공단에 도착해 필요한 서류를 창구에 제출하고 돌아서는 순간, 창구에서 정우씨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정우님! 여기 표시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황한 정우씨는 얼른 돌아가 창구 직원에게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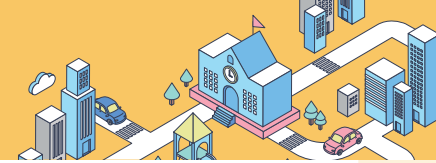
“아! 네 죄송합니다. 무슨 표시를 안 했나요?”

“네, 새로 발급될 면허증 수령지에 표기하지 않으셨네요.”

면허증 수령지 표시할 곳을 급히 찾아보던 정우씨는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서 중 택일하는 칸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아, 여기 다시 오거나 경찰서로 가야하나?’ 두 장소 모두 정우씨의 가게와는 꽤 거리가 있는 곳이라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면허증 찾자고 가게를 하루 더 비우기엔 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저... 혹시, 다른 곳에서 받을 방법은 없나요?”라고 묻는 정우씨에게 공단 직원이 웃으며 답해주었다.



“가능합니다. 원하시면 등기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등기 선택할 수 있는 칸이 없어서 공단이나 경찰서에 가야만 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신청서에 등기도 선택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정말 헛갈리지 않겠어요. 감사합니다.”

가게 주소를 적어두고 나오는 정우씨. 이제 더 이상 가게를 비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가볍다.

이렇게 개선됩니다



「도로교통법」 제86조, 제87조는 운전면허증의 재발급과 운전면허증의 갱신 발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운전면허증 재발급 혹은 갱신 발급 신청 시 등기우편으로 이를 수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 서식의 운전면허증 재발급, 갱신 신청서에는 등기우편 선택란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등기수령을 원하는 경우에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이같은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23년까지 별지 내용을 수정하여 등기우편 수령 여부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P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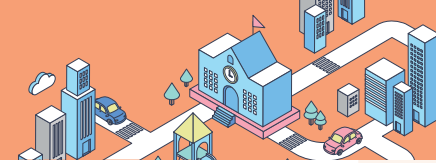
02

2022 국민불편 법령정비 사례집

일반정비

- ① 국민 안전 보호
- ② 사회적 약자 보호
- ③ 국민 불편 해소
- ④ 법령의 명확화
- ⑤ 법체계 정비





01 수중레저사업 종사자 안전교육 면제요건 명확화



법령명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관 부처 : 해양수산부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은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2년마다 안전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는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지만, 현재 같은 법률 제11조제3항은 삭제된 상태로서 안전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어떤 요건 하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지가 불명확함.



개선내용

이미 삭제된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여, 안전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는 요건을 명확하게 개선



정비계획
(년도)

2023(예정)



02 비상음향장치 기준 개선안



법령명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



소관 부처 : 소방청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은 화재발생상황을 음향으로 경보하는 설비에 관하여 음량 크기, 설치 간격 등 기초적인 기준만을 제공하고, 경종·사이렌의 2가지 경보음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해외 연구 결과 재난성 화재의 86%가 수면 중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경보음을 인지하지 못한 사망자가 20.8%를 차지하고 있어 수면 중 경보음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 인명사고의 주된 원인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현행의 기준은 화재로 인한 안전관리에 미흡함.



개선내용

수면 공간의 최소 경보음 음량, 주파수의 범위 규정, 다양한 경보음의 도입 등으로 화재 경보 설비의 기준을 세분화하여 화재 안전관리 강화



정비계획
(년도)

2023(예정)



03

수렵면허의 제한 사유 명확화



법령명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관 부처 : 환경부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제49조제1항제3호에서는 수렵면허 취소·정지 사유로 수렵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를 규정하는데, 수확기 피해방지단에 소속된 수렵면허 소지자가 유해야생동물 포획행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수렵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



개선내용

유해야생동물 포획행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에 대해서도 수렵 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렵면허를 제한하도록 개선



정비계획
(년도)

2023(예정)



04

주택건설공사 수급인의 자격 등에 대한 감리자의 의무적 확인의 근거 마련



법령명 : 주택법



소관 부처 : 국토교통부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는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가 주택건설공사 수급인의 시공자격 및 수급인의 건설기술인 배치의 적정성을 임의로 확인할 수 있고, 확인 결과 위법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사업주체 등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감리자의 확인 및 통보 업무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이에 대한 제재 수단도 없어 해당 조항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국민 안전 보호에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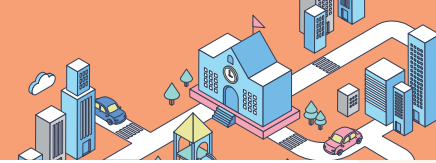
개선내용

주택건설공사 수급인의 자격 등에 대한 감리자의 확인·통보 의무를 「주택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수단을 함께 규정하도록 개선



정비계획
(년도)

2023(예정)



05

자체방호계획의 수립 시 통합 대상인 방호인력의 범위 합리화



법령명 : 통합방위법



소관 부처 : 국방부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통합방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한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할 경우, 개인화기의 사용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방호인력을 통합하는 내용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중요시설의 자체방호에 미흡.



개선내용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한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할 때 개인화기를 사용하는 방호인력만을 통합하도록 개선



정비계획
(년도)

2023(예정)



06

조종교육증명을 갖춘 사람의 의미 명확화



법령명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소관 부처 : 국토교통부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의 응시자격을 “조종교육증명을 갖춘 사람”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비행경험이 없더라도 이에 해당될 수 있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



개선내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자격증명 응시경력 요건 중 “조종교육증명을 갖춘 사람”이란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비행경력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명시



정비계획
(년도)

개정 소요 발생 시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P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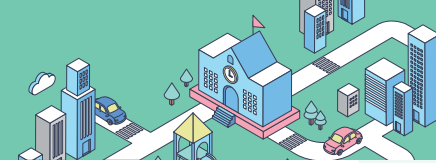
02

2022 국민불편 법령정비 사례집

일반정비



- ① 국민 안전 보호
- ② 사회적 약자 보호
- ③ 국민 불편 해소
- ④ 법령의 명확화
- ⑤ 법체계 정비



0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확대



법령명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소관 부처 : 법무부, 국토교통부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는 해당 법령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규정하면서,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와 유사하게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조손 가정, 미혼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제5조의2의 특례를 신설하여 이들을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는데, 개별 법령에서 지원 대상, 감면 대상,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등의 범위를 정하면서 「한부모가족지원법」을 인용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만 명시하는 경우가 있어 제5조의2에 따른 조손 가정, 미혼모 가정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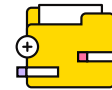
개선내용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부분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개정



정비계획
(년도)

2023(예정)



08

주소득자가 부소득자와 이혼한 경우를 긴급복지지원 대상에 추가



법령명 : 긴급복지지원법



소관 부처 : 보건복지부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는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를, 보건복지부 고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1호는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를 '위기상황'으로 규정하는데, 주소득자와 부소득자의 소득이 크게 차이가 없을 경우 부소득자에게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에도 주소득자의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긴급복지지원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아 주소득자의 보호에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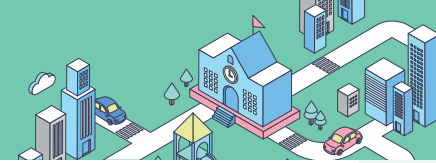
개선내용

'부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거나, 주소득자가 부소득자와 이혼한 때'도 긴급복지지원의 대상에 해당하도록 개선



정비계획
(년도)

개정 소요 발생 시



09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



법령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소관 부처 : 국토교통부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제16조에 근거하여 각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콜택시 등의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과 별표1의2에 규정된 장애인콜택시 차량 내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은 없어서 이용하는 일반적인 휠체어를 기준으로 되어 있는 등 법령이 미비하여, 침대형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특수차량은 전국 장애인콜택시 차량의 0.1%에 지나지 않는 등 중증장애인의 보호에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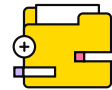
개선내용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법령상 안전기준 개선



정비계획
(년도)

2024(예정)



10

전세 사기 방지 등을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 등의 열람 가능화



법령명 : 국세징수법



소관 부처 : 기획재정부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세 등은 다른 채권 등에 우선해 징수되므로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에 대한 추징과정에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이 보호받지 못하게 될 수 있어 같은 법 제109조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열람이 불가능하므로 임대인이 국세 체납액을 숨기고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사기 수법 등이 문제됨.



개선내용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국세 또는 체납액을 열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정비계획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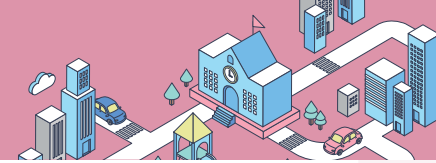
2023(예정)

2022 국민불편 법령정비 사례집

일반정비

- ① 국민 안전 보호
- ② 사회적 약자 보호
- ③ 국민 불편 해소
- ④ 법령의 명확화
- ⑤ 법체계 정비





11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근거 마련



법령명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적용업체가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도입할 경우 보조금을



소관 부처 : 환경부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한국환경공단은 배출권거래제 적용업체가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도입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수행 중이고 최근 관련 예산이 증가했으나, 공단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규정이 없어, 인력·예산 확보 등 사업수행이 곤란.



개선내용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위임·위탁 규정을 업무 현실에 맞도록 정비·개선



정비계획
(년도)

2023(예정)



12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예비타당성 면제



법령명 :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관 부처 : 환경부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은 법정 처리의무가 있는 음식물폐기물·분뇨 등만을 처리하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나, 법정처리 의무가 없는 가축분뇨를 포함하여 처리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해당하여,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의 설치가 지연되는 문제가 생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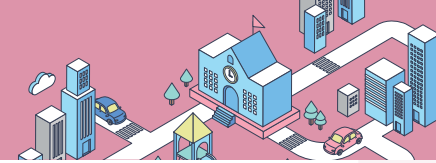
개선내용

관련법령에 가축분뇨를 일부 처리하는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에 한정해서 가축분뇨 처리를 의무화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도록 개선



정비계획
(년도)

2023(예정)



13

취업지원의 유예 횟수의 예외적 확대 필요



법령명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소관 부처 : 고용노동부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의하면 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자격자 등은 임신 등의 사유로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2년의 한도에서 단 한 차례만 취업지원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어, 코로나 사태처럼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에 어려움이 있음.



개선내용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할 수 없는 사유의 해소 여부 및 기간이 불투명한 경우 등에는 추가적으로 취업지원 유예 신청을 허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



정비계획
(년도)

2023(예정)



14

부정한 보험급여비용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의 의무화



법령명 : 국민건강보험법



소관 부처 : 보건복지부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등에게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사무장병원 등에 해당할 때에는 개설자에게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 형식으로 인하여 대법원은 부당이득징수를 재량행위로 해석하고 있어 보험재정 손실 및 건강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따라서 국민들에게 손해가 생기는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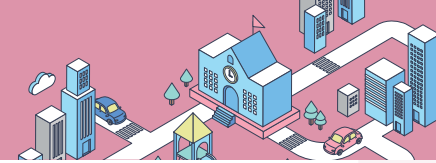
개선내용

공단이 부당이득징수액 전부를 의무적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일부를 징수하도록 하고, 사무장병원 등 불법적인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연대책임도 의무적으로 지우도록 개선



정비계획
(년도)

2023(예정)



1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 청년의 범위 확대



법령명: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취업 지원의 대상이 되는 청년의 연령을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하여 그 상한이 「청년기본법」상의 청년 연령의 상한인 34세보다 낮으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의 범위가 협소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개선내용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 연령의 상한인 34세로 상향



정비계획
(년도)

2023(예정)



16

저공해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 정비



법령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소관 부처: 환경부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현재 전기차나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은 연비, 주행거리, 가격 등의 형식적인 사항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저공해차를 구매할 유인이 부족하여 환경보전에 미흡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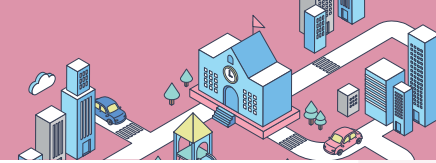
개선내용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충전하는 설비를 갖춘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더 지급하는 등 보다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개선



정비계획
(년도)

2023(예정)



17

국가가 직접 수소충전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법령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소관 부처 : 환경부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수소충전소의 경우 국가가 직접 설치와 운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민간사업자의 경우 이윤이 확보되는 도시에 설치를 희망하고 지자체의 경우에는 개별 지역에 중점을 두고 접근하면서 전 국가적으로 균형 있는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개선내용

국가 또는 유관 사업의 경험과 추진력을 가진 한국환경공단이 수소충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정비계획
(년도)

개정 소요 발생 시



18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기준 합리화



법령명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 부처 : 해양수산부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3조는 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 공유수면에 건축물 등을 신축하는 등(「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제1호)의 행위는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해당 공유수면의 가격이 있는 경우에도 이 규정 때문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점용료·사용료를 산정해야 하므로 합리적이지 않고 보통 인접 토지의 가격이 높아 높은 금액이 산정되는 문제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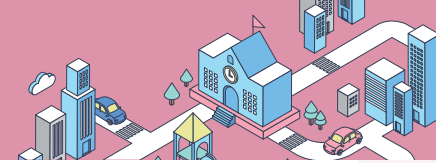


개선내용

해당 공유수면의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개선

정비계획
(년도)

2023(예정)



19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행정규칙이 아닌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규정



법령명: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소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에서는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행정처분을 위임하는 통상의 입법례와 달리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행정규칙으로 직접 위임하고 있는데, 제재처분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수시로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법제처 심사를 받는 대통령령 또는 부령과 달리 행정규칙은 소관부처 단독으로 제정·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재처분의 기준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마련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문제가 있음.



개선내용

행정처분의 기준을 법률에서 고시로 위임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위임하도록 개선



정비계획
(년도)

2023(예정)



20

소형어선에 비치하는 '검사증서'의 전자적 발급 도입



법령명: 어선법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어선법」 제21조에 따라 어선의 소유자는 정기검사, 특별검사, 임시항행검사 등을 받아야하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어선검사증서·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이하 “검사증서”)를 어선에 비치해야 하며, 같은 법 제53조제2항제8호는 검사증서를 갖추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소형어선의 특성상 해수 유입 등으로 종이 재질의 증서는 관리가 어렵고 검사증서의 훼손·분실이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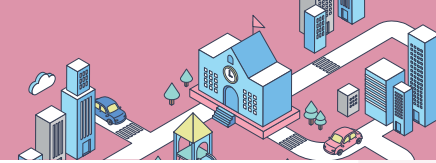
개선내용

'검사증서'를 전자적으로 발급하는 방안을 도입



정비계획
(년도)

2023(예정)



21

사립학교법에 따른 이사회 회의록 공개 청구 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완화



법령명 : 사립학교법 시행령



소관 부처 : 교육부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사립학교법」 제18조의2에 따라 이사회의 안건, 의사 등을 작성한 회의록의 경우 비공개사항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고, 공개 기간이 지난 후에는 별도 신청을 통해 공개를 청구하게 되는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3제2항에 따르면 이사회 회의록 공개 청구를 하는 청구인은 공개청구서에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 청구하도록 하고 있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의 문제가 있음.



개선내용

사립학교법인 이사회의 회의록 공개 청구를 위해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



정비계획
(년도)

개정 소요 발생 시(23년 개정계획 수립 및 입법절차 추진)



22

핵연료물질의 정련사업 등의 신고사항 확대



법령명 : 원자력안전법



소관 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1항은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의 정련사업 또는 가공사업을 하려는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신고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은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사업소의 명칭 등만 규정하고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분명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아, 단순 오기 등을 수정하는 경우에도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개선내용

단순 오기 등의 수정 시에는 위원회의 허가 대신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정비계획
(년도)

개정소요 발생시



23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에 따른 회계서류의 공개 방법 확대



법령명 : 공동주택관리법



소관 부처 : 국토교통부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은 회계서류의 작성·보관 및 공개와 관련하여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의 관리비, 계약서와 같이 동별 게시판을 사용하는 공개 방법을 제외하고 있는데, 아파트 홈페이지는 접근성이 낮을 가능성이 있고,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개별통지에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



개선내용

회계서류도 관리비, 계약서와 같이 동별 게시판에 게시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개선



정비계획
(년도)

2023(예정)



24

세대원 중 일부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표시된 주민등록표 등본 교부



법령명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소관 부처 : 행정안전부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주민등록표 등본을 교부받기 위해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신청서를 제출할 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포함해서 교부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여부의 선택지가 ‘본인’과 ‘세대원’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세대원 중 일부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필요한 경우에도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시된 상태로 교부되어 개인정보 보호에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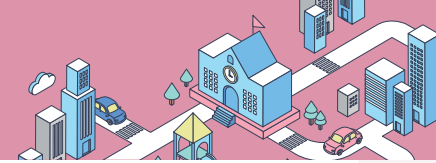
개선내용

세대원 중 일부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표시된 주민등록표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개선



정비계획
(년도)

2023(예정)



25

구조기관에서 작성하는 서식 내용을 국민 편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정비



법령명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관 부처 : 소방청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소방서 등 구조기관에서 작성하는 구조 거절 확인서 등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의 서식에 행정청의 고지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통합민원창구의 명칭인 “정부24”가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인 정보를 직접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국민들의 불편이 생기는 문제가 있음.



개선내용

위 서식에 행정청의 고지의무를 명시하고 통합민원창구의 명칭을 “정부24”로 변경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활용을 통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도록 개선



정비계획
(년도)

2023(예정)



26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신청서에 등기우편 수령 항목 추가



법령명 : 도로교통법



소관 부처 : 경찰청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운전면허증 갱신 혹은 재발급 신청 시 등기우편으로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지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 서식의 운전면허증 갱신, 재발급 신청서에는 등기우편으로 운전면허증을 수령하겠다는 것을 표시할 수 있는 항목이 없어 신청인이 이를 알지 못하고 관공서에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등의 불편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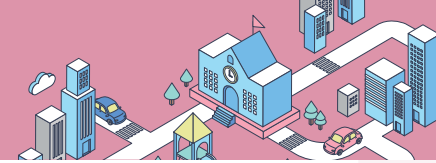
개선내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 갱신·재발급 신청서에 등기우편 수령 희망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



정비계획
(년도)

2023(예정)



27

'석면조사기관 신규 등록을 위한 정도관리 상시화



법령명 :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소관 부처 : 고용노동부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정도관리 실시기관(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매년 1회 이상 정도관리를 실시하고 있지만, 신규 석면조사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1년에 1회 실시하는 정도관리 시기를 놓치면 석면조사기관으로서 사업을 개시할 수 없고, 다음 정도관리 실시 기간(1년 뒤)을 기다려야 하므로 석면조사기관 사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



개선내용

정도관리 주기를 확대(분기별 1회 혹은 신규 등록 신청 시 실시)하거나 기술자 단위로 받도록 하여 정도관리를 마친 기술자를 즉시 고용하여 석면조사기관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개선



정비계획
(년도)

2023(예정)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P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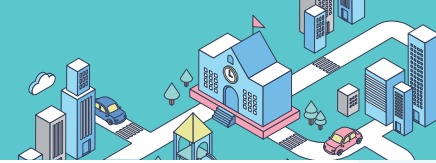
02

2022 국민불편 법령정비 사례집

일반정비

- ① 국민 안전 보호
- ② 사회적 약자 보호
- ③ 국민 불편 해소
- ④ 법령의 명확화
- ⑤ 법체계 정비





28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일반군무원의 재직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명확화



법령명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소관 부처 : 국방부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9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일반직공무원”의 재직연수에 산입하고 있는 반면, 군무원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재직기간을 “일반군무원”의 재직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함



개선내용

“임기제공무원”과 같이 “일반임기제공무원” 등 “임기제일반군무원”의 재직기간을 “일반군무원”의 재직연수에 산입하도록 개선



정비계획
(년도)

2023(예정)



29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시 영치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확화



법령명 : 자동차관리법



소관 부처 : 국토교통부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는 같은 법 제14조의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도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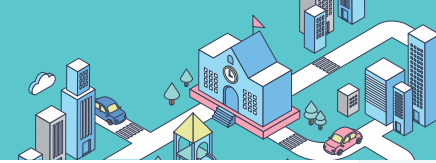
개선내용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로서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반영



정비계획
(년도)

2023(예정)



30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의 경우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의제 대상이 대지조성사업에 한정됨을 명확화



법령명 : 택지개발촉진법



소관 부처 : 국토교통부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는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의 대상을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제되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개선내용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법」 제15조의 사업계획 승인 의제 대상은 같은 조 제1항의 대지조성사업에 한정됨을 명시화



정비계획
(년도)

2023(예정)



31

골재채취허가 변경승인 요건 완화



법령명 : 골재채취법 시행령



소관 부처 : 국토교통부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골재채취법」 제25조제1항 본문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채취허가량의 5퍼센트 이상의 변경 외”의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채취허가량을 5퍼센트 이상 감소시키려는 경우 골재의 부존량이 줄어들거나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 발생 위험이 증가할 여지가 없음에도 이를 변경승인 사항으로 본다면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당초 허가받은 양 만큼 채취를 못하는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행정청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허가취소 또는 벌칙이 부여될 수 있으므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는 문제.



개선내용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채취허가량의 5퍼센트 이상을 감소시키려는 경우 이를 신고사항으로 완화



정비계획
(년도)

2023(예정)



32

노상주차장 폐지 의무 명확화



법령명 :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소관 부처 : 국토교통부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2021년 1월 12일 「주차장법」이 일부개정 되어 같은 법 제7조제3항제3호는 노상주차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어린이·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의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보호구역의 노상주차장 폐지가 의무사항인지 불명확함.



개선내용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노상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도록 개선



정비계획
(년도)

2023, 2024(예정)



33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인정요건 구체화



법령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소관 부처 : 국토교통부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건축법」에 따라 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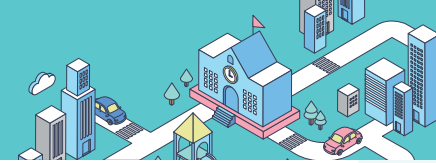
개선내용

주택을 신축한 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것인지 여부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개선



정비계획
(년도)

2023(예정)



34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여부의 판단 기준인 “연면적”의 의미 명확화



법령명: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연면적”의 의미나 산정방법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서는 연면적을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규정하고 있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의 “연면적”의 의미가 연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는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의미하는지 불명확함.



개선내용

기존 해석례(21-0357)에 따르면, 건설사업자가 사업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제1항 각 호의 “연면적”은 연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므로, 사업부지 내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하는 의미임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도록 개선



정비계획
(년도)

2023, 2024(예정)



35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 판단 기준일 명확화



법령명: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에서는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인 철거 주택 소유자의 판단 기준일을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개발법」과 같이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이전에 공람·공고 절차가 규정된 경우 등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할 때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개선내용

기존 해석례(21-0570)에 따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에 따른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는 날”은 「도시개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을 의미하는데, 「도시개발법」과 같이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이전에 공람·공고 절차가 규정된 경우에는 고시일이 아닌 공람·공고일임이 판단 기준일임을 명확히 하도록 개선



정비계획
(년도)

2023(예정)



36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관청의 명확화



법령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소관 부처 : 국토교통부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관할관청을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4조에서는 영업소 등의 관할관청을 “영업소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규칙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이 경우 “관할관청”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인지,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인지가 문언상 불분명함.



개선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등록을 관할하는 관청이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라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



정비계획
(년도)

2023(예정)



37

토요일 등이 공람기간에 포함된 경우 공람실시 여부 명확화



법령명 : 도시개발법 시행령



소관 부처 : 국토교통부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기간은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하는데,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 불분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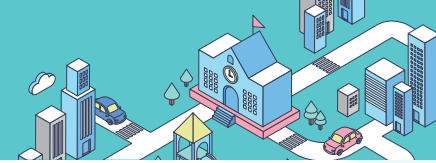
개선내용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람기간에 토요일 및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그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규정



정비계획
(년도)

2023(예정)



38

휴게음식점 등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의 설치 허용 범위 확대



법령명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소관 부처 : 국토교통부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제라목2)나)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 등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로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되는 휴게음식점 등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인접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소규모의 수로나 도로 등으로 분리되어 주차장으로 활용함에 있어 “인접한 토지”와 사실상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도 주차장 설치를 허가할 수 없게 되어 불합리함.



개선내용

소규모의 수로나 도로 등으로 분리되어 주차장으로 활용함에 있어 “인접한 토지”와 사실상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주차장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는 토지로 포함



정비계획
(년도)

2023(예정)



39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 가능한 콩나물재배사의 면적 기준 명확화



법령명 : 농지법 시행규칙



소관 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4호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 가능한 콩나물재배사의 판단 기준인 ‘총부지의 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지를 판단하는 경우, 농업진흥구역 안의 면적만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농업진흥구역 안과 밖의 면적을 모두 합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불명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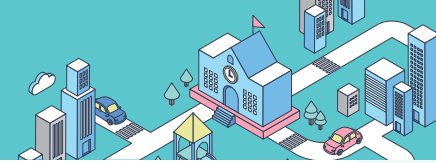
개선내용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 가능한 콩나물재배사의 판단 기준인 ‘총부지의 면적’에 농업진흥구역 안과 밖의 면적이 모두 포함된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명확하게 개선



정비계획
(년도)

2023(예정)



40

체육시설업 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부동산 소유권이나 타인 소유 부동산의 사용권 상실을 명확화



법령명 : 체육시설법



소관 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타인 소유 부동산에서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의 체육시설업 등록 신청이나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등은 신청인이 해당 부동산의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서는 시·도지사등이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면서 ‘타인 소유 부동산의 사용권을 상실한 경우’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타인 소유 부동산의 사용권을 상실한 경우에 시·도지사등이 직권으로 등록 등의 취소를 할 수 있는지 불분명함.



개선내용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의 요건”으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할 것을 명시하고,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상실하여 체육시설업 등록 또는 신고 요건을 미충족하게 된 경우 제재의 대상이 됨을 분명하게 규정



정비계획
(년도)

2023, 2024(예정)



41

산림경영계획 인가신청 주체 명확화



법령명 : 산림자원법



소관 부처 : 산림청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유림에 대해 산림경영계획서의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 외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가 포함되는데, 이러한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불명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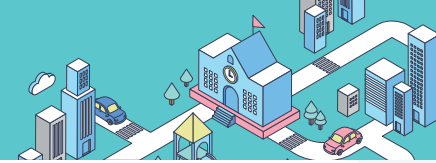
개선내용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규정



정비계획
(년도)

2024(예정)



42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정부관리기업체”의 범위 구체화



법령명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소관 부처 : 소방청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에서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4항제1호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 규정하는 것과 달리 “정부관리기업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그 범위가 불명확함.



개선내용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에서 사용되는 “정부관리기업체”의 용어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비



정비계획
(년도)

2023(예정)



43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조정 대상 구체화



법령명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소관 부처 : 해양수산부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는 동일인이 같은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단순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이 변경되어 점용료·사용료가 상승하는 경우에도 점용료·사용료의 조정대상으로 포함되어 불합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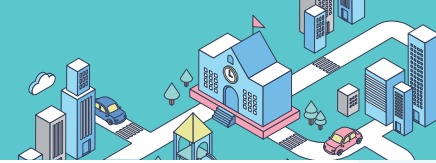
개선내용

토지가격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격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점용료·사용료의 조정 대상으로 한정



정비계획
(년도)

2023(예정)



44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인접 대지경계선의 범위 명확화



법령명: 건축법 시행령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건축법」 제61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일정한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의 인접 대지경계선의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대지에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 인접 대지경계선의 범위가 불명확함.



개선내용

인접 대지경계선의 기준이 되는 대지는 “건축물이 없는 대지”로 명확히 한정



정비계획
(년도)

정비완료



45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주택 소유 요건 규정 명확화



법령명: 주택법 시행령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제가목에서는 지역주택조합원의 주택소유 요건을 규정하면서 같은 목 1)에서는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의 주택 소유 여부를 지역주택조합원 요건 판단 시 판단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의 범위가 불명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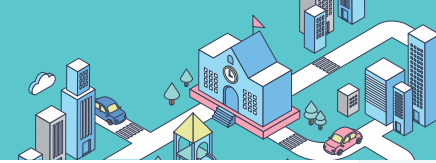
개선내용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의 범위에는 배우자가 세대주인 세대의 경우만 해당함을 명확히 드러나도록 개선



정비계획
(년도)

2023(예정)



46

재난 및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 총괄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부과 여부 명확화



법령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소관 부처 : 행정안전부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제4항에 따라 총괄기관으로 지정되었으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기관과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러한 총괄기관의 임직원에게도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불분명함.



개선내용

중요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중요한 지위를 갖게 되는 총괄기관의 임직원에게도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필요한 일정한 경우 총괄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개선



정비계획
(년도)

2023(예정)



47

「환경분쟁 조정법」상 조정의 조서 작성 절차 명확화



법령명 :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소관 부처 : 환경부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환경분쟁 조정법」은 조정의 경우 조정위원회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도록 규정하는데,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서는 당사자 등이 조정안을 수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의 수락 절차를 거쳐야만 조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불명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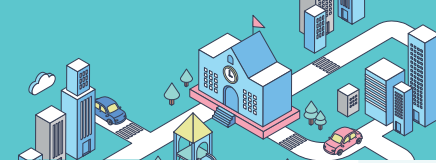
개선내용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의 수락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작성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



정비계획
(년도)

2023, 2024(예정)



48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임기 명확화



법령명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소관 부처 : 국민권익위원회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서는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만을 규정하고 있고 부위원장의 임기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같은 법 제13조의 해석상 부위원장이 위원에 포함되므로 그 임기는 제16조 제2항의 임기와 같다고 해석되고 있는데, 부위원장이 위원과는 별도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부위원장의 임기가 위원과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위원장의 임기규정은 불명확함.



개선내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에 부위원장의 임기를 추가하여, 부위원장의 임기를 명확하게 규정



정비계획
(년도)

2023(예정)



49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명확화



법령명 : 공무원재해보상법



소관 부처 : 인사혁신처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을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에 관하여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교도관 등 공무원의 종류와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같은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로 사망한 경우라면 모두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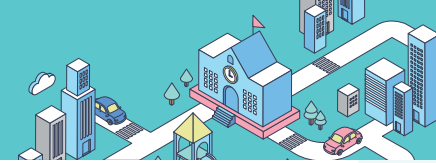
개선내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도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였다는 요건이 별도로 충족되어야만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



정비계획
(년도)

2023(예정)



50

잔여폐기물 처리주체 명확화



법령명: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소관 부처: 환경부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생활폐기물 배출구역 관할 시장 등과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사업장이 소재한 구역의 관할 시장 등이 다른 경우, “관할 시장 등”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불명확.



개선내용

잔여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제거목3)의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



정비계획
(년도)

2023(예정)



51

혈액 채취 방식의 음주 측정 규정 정비



법령명: 도로교통법



소관 부처: 경찰청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음주운전의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1차적으로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혈액 채취 등으로 재측정할 수 있으며, 호흡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의 형으로 처벌되는데, 실무와 판례상 운전자가 처음부터 채혈을 요구하거나,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지 않는 때도 일정한 경우에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다시 혈액측정 등을 할 수 있음에도, 법 문언에 따르면 호흡측정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만 혈액측정 등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고, 또한 벌칙규정의 경우 호흡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만 상정하고 있어 혈액측정을 거부한 경우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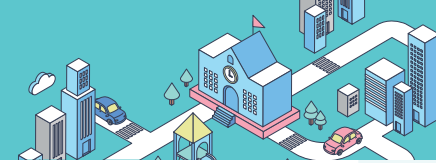
개선내용

처음부터 채혈을 요구하거나,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지 않는 때도 예외적 사정이 있는 경우는 혈액측정 등을 할 수 있음과, 자발적으로 혈액측정에 동의했음에도 호흡, 혈액측정 모두 거부하는 경우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



정비계획
(년도)

개정 소요 발생 시



52

토지이동, 건축물 사용승인의 온라인 신청 관련 법 규정 명확화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0조에 따른 토지이동신청과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의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가능함에도, 관련 법령에는 다른 신청의 경우와 다르게 온라인 신청에 관한 규정이 없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함.



개선내용

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



정비계획
(년도)

개정 소요 발생 시



53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 명확화



법령명: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해야 하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규정하면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명시하고 있지 않아, 민원인이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이 반드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이의신청을 처리해야 하는지 불분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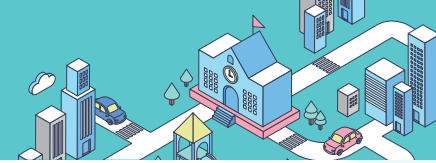
개선내용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필요적으로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과 심의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한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



정비계획
(년도)

2023(예정)



54

참전사실 확인통보서 개선 제안



법령명: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 부처: 국가보훈처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을 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국방부장관 등에게 참전사실 확인 요청을 하고 국방부장관은 요청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의 “참전사실 확인통보서” 서식에 따라 내용을 기재하여, 신청인과 국가보훈처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해야 하는데, 서식에는 “참전사실이 있는 경우”, “참전사실이 없는 사람인 경우 그 사유”라는 두 항목이 있어, 참전사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참전사실 확인통보서’라는 제목으로 통보되고 있어 고령의 신청인 등이 “참전사실 확인통보”라는 문구만 보고 참전사실이 확인되었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음.



개선내용

참전사실 확인통보서라는 서식의 명칭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참전사실여부 확인결과 통보서 등”으로 개선



정비계획
(년도)

개정 소요 발생 시



55

공칭작동온도에 따른 감지기의 색상 표시 명확화



법령명: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관 부처: 소방청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7조는 공칭작동온도가 80℃ 이하인 것은 백색, 80℃ 이상 120℃ 이하인 것은 청색, 120℃ 이상인 것은 적색의 색상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80℃, 120℃인 경우에는 어떤 색으로 표시할지 불분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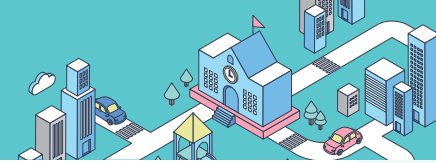
개선내용

공칭작동온도가 80℃, 120℃인 경우 어느 색상으로 표시할지 분명히 규정



정비계획
(년도)

개정 소요 발생 시



56

의무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업무정지처분의 가중 기준 명확화



법령명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관 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둘 이상이고, 의무 위반 행위에 관한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 무거운 처분의 업무정지기간에 가벼운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하는데, 가벼운 처분이 여러 가지인 경우 모든 처분의 2분의 1을 가중할 것인지, 그 중 어느 하나의 처분의 2분의 1만 가중하면 되는지 불분명함.



개선내용

가장 무거운 처분의 업무정지기간에 나머지 모든 처분의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가중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가중할 수 있도록 하되”를 “가중한다”로 규정



정비계획
(년도)

2023(예정)



57

수사기관에 대한 부정청탁 신고 송부 제도의 법률상 근거 마련



법령명 : 청탁금지법



소관 부처 : 국민권익위원회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받은 부정청탁 신고를 수사기관 등에 송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고 처리와 관련하여 ‘이첩’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송부’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 신고에 관한 일체의 권한이 수사기관 등으로 이전되고, 송부받은 수사기관 등은 정해진 기한에 조사 등을 마쳐야 하며, 신고를 송부한 국민권익위원회 및 신고자에 대한 통지 의무가 발생하는 등 송부 효과의 중요성에 비추어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송부의 근거 규정을 둔 것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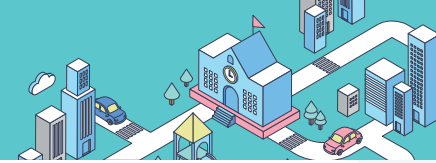
개선내용

법률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수사기관에 대한 송부 제도의 근거를 마련



정비계획
(년도)

2023(예정)



58

감염병 구분 기준 변경에 따른 「학교보건법 시행령」정비



법령명: 학교보건법 시행령



소관 부처: 교육부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을 질환의 특성별 ‘군’별로 구분했었는데, 2018. 3. 27. 개정으로 감염병의 분류체계를 심각도, 전파력, 격리수준 등을 중심으로 한 ‘급’별 분류체계로 개편하였음에도,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2조의2제2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제4군감염병”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감염병 분류 체계의 변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개선내용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2항을 정비하여 새로운 ‘급’별 감염병 분류 체계를 반영하도록 개선



정비계획
(년도)

2023(예정)



59

「화학물질관리법」의 종전 제명을 인용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정비



법령명: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관 부처: 법무부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의 종전 제명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및 같은 법에 따른 등록제도를 인용하고 있어 현재의 법체계와 괴리가 있음.



개선내용

「화학물질관리법」의 종전 제명과 종전의 등록제도를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과 맞도록 개선



정비계획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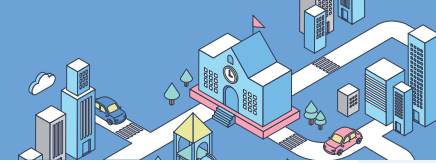
2023(예정)

2022 국민불편 법령정비 사례집

일반정비



- ① 국민 안전 보호
- ② 사회적 약자 보호
- ③ 국민 불편 해소
- ④ 법령의 명확화
- ⑤ 법체계 정비



60

별칙 규정이 적용되는 공무원 의제 범위 명확화



법령명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소관 부처 : 국토교통부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81조제2호에서는 별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자를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서 중앙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합심의위원회”로 약칭하고 있어 제81조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회는 중앙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로 보므로, 같은 법 제51조제11항에 따라 중앙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관련 규정이 준용되는 지방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범위에서 제외되어 별칙 규정의 실효성 확보에 미흡.



개선내용

지방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도 별칙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 의제 규정이 적용되도록 개선



정비계획
(년도)

2023(예정)



61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는 표현 개선



법령명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소관 부처 : 행정안전부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제2항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가 심의하는 사항에 관해서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심의사항에 관한 통상적인 표현 방법인 “~계획”, “~정책”, “~에 관한 사항” 등의 표현이 아닌 상황 발생에 관한 표현인 “~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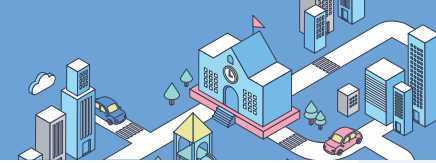
개선내용

심의사항과 관련된 통상적인 표현으로 명확히 규정



정비계획
(년도)

2023(예정)



62

「경찰공무원 임용령」상 존재하지 않는 법조문 인용의 오류 정비



법령명: 경찰공무원 임용령



소관 부처: 경찰청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의 응시요건에 관한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6조제7항에서는 외국어 능력 기준에 관해서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3항제6호를 인용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조문으로 법체계상 문제가 있음.



개선내용

외국어 능력 기준에 관해서 명시하고 있는 「경찰공무원법」 제10조제3항제6호를 인용하도록 개선



정비계획
(년도)

해당 조문의 인용조문을 “법 제10조제3항제6호”로 수정하는 개정령안을 마련, '22. 3. 8.부터 4. 18.까지 입법예고 진행 중임
2023(예정)



63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상 같은 의미를 가지는 용어에 관한 다른 표현 정비



법령명: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제4호에서는 “주된 컴퓨터설비”라는 용어를,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서는 “주요 컴퓨터설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용어가 법령의 본문과 별지서식에 다르게 표현되고 있어 의미를 혼동할 우려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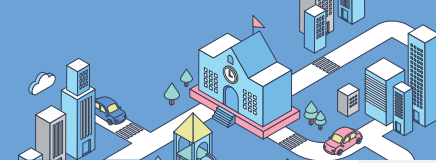
개선내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본문의 “주된 컴퓨터설비”와 관련 별지서식의 “주요 컴퓨터설비”의 용어를 통일적으로 규정



정비계획
(년도)

2023(예정)



64

고시로 규정된 안전검사·측정 관련 행정처분의 기준을 부령으로 상향 규정



법령명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소관 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농림축산식품부령인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은 법률에서 위임한 지정취소, 업무정지에 필요한 사항을 부령에 전혀 정하지 않고,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등을 모두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도록 재위임하여 위임·재위임에 관한 헌법상 원칙에 위배됨.



개선내용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인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령인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상향하여 규정



정비계획
(년도)

2023(예정)



65

폐지된 개념인 ‘월차 유급휴가’의 용어 정비



법령명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소관 부처 : 고용노동부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2항제4호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월차·연차 유급휴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미 폐지된 개념인 「근로기준법」상 월차 유급휴가라는 용어의 사용으로 인해 의미를 혼동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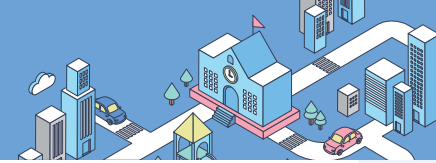
개선내용

“월차” 용어를 삭제



정비계획
(년도)

정비완료



66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행정처분의 당사자 이외의 제3자 납부 조문 신설



법령명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소관 부처 : 행정안전부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지방세징수법」 제2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제3자가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제3자의 납부를 규정하지 않아 인·허가 등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과 납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상이하여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해 제3자납부가 필요한 경우에도 체납자가 아닌 제3자는 납부할 수 없어,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지 않고 법체계적으로 문제가 있음.



개선내용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도 「지방세징수법」에서와 같이 제3자의 납부 규정을 신설



정비계획
(년도)

2023(예정)



67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가목의 “영업자”의 범위 명확화



법령명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소관 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약국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다수 인용되는 “영업자”는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어, 약국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가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함.



개선내용

약국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영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



정비계획
(년도)

개정소요 발생시



68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도 개선



법령명 : 지방계약법 시행령



소관 부처 : 행정안전부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입찰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자(다목), 계약이행능력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후 심사포기한 자(마목),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후 평가를 포기한 자(바목), 실시설계서 제출하지 않은 자(사목) 등은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데, 이 제한 사유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개정되거나 삭제되었음에도 그대로 규정되어 있어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며 기준이 일관되지 못해 법체계상 혼란이 발생 가능성이 있음.



개선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개정되거나 삭제된 규정에 대응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상 제한 사유도 개정하거나 삭제



정비계획
(년도)

2023(예정)



2022 국민불편 법령정비 사례집

기획정비



⑥ 기획정비

- ⑥-1. 청년 지원을 위한 법령정비
- ⑥-2. 개인정보 침해개선 법령정비
- ⑥-3.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
- ⑥-4.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69

청년 지원 등 공정·상식에 부합하는 법령 정비



추진 배경

- 청년 세대의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는 불공정·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청년의 경제활동 의지를 되살리는 법령정비 추진
- (실무경력 미반영 문제) 법령에서 각종 자격요건 중 인력 채용 등을 위한 실무경력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학력 또는 자격증 취득 후의 경력만 인정함으로써 취득 전 실무에서 쌓은 경력이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 발생
- (정비방향) 취업 후 진학 및 일·학습 병행 청년에게 불공정한 자격제도(학력·자격증 취득 이후 경력만 인정)를 합리적으로 개선(학력·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도 인정)



개선내용

-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취업하여 실무경력을 쌓고 나중에 대학에 진학하는 청년 등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각종 자격요건 등에 포함된 '실무경력' 규정을 적용할 때 학위 취득 전의 실무경력도 학위 취득 후의 실무경력에 동등하게 인정하도록 정비
 -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15개 부처 소관 32개 대통령령 공포·시행*(8. 9.)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 13개 부처 소관 28개 총리령·부령 개정안 공포·시행**(12. 19.)
- * 유치원 강사, 과학관 전문직원, 범죄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무대시설 안전진단기관 기술인력, 도시가스 안전관리책임자 등 42개 직업 및 자격 관련
-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교수요원,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기업부설 연구기관 연구전담요원,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기술인력, 의약품 제조관리자 등 34개 직업 및 자격 관련



실무경력 인정범위 확대 등 법령정비 주요 사례

현재

학위 등 취득 후 쌓은 실무경력만 인정



개선

학위 등 취득 전 쌓은 실무경력도 인정

(유형 1) 유치원 강사 등 취업 시 필요한 실무경력 인정범위 확대



유치원에서 유아교육을 담당하거나 보조하는 유치원 강사나 기간제 교사 등으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졸업 후에 쌓은 2년 이상의 유아교육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필요했지만, 법령 정비 후 전문대학 졸업 전에 쌓은 실무경력도 인정받도록 개선됨



개선내용

(유형 2) 환경영향평가사 자격 취득을 위한 응시자격의 환경 분야 실무경력 인정 범위 확대



환경 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대학 졸업 후 환경분야에서의 실무 종사 경력이 6년 또는 7년 이상 필요했지만, 법령 정비 후 대학 졸업 전에 실무에 종사했던 경력도 인정받도록 개선됨

(유형 3) 중소기업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양성과정 수강을 위한 실무경력 요건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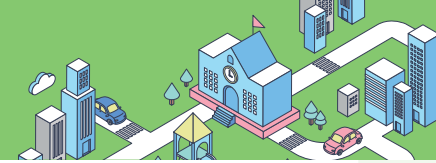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에 대한 전문적·종합적인 진단 및 지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를 수강하기 위해 필요한 진단·지도 관련 실무경력을 전문대학 졸업자는 기존 15년에서 11년으로, 대학 졸업자는 10년에서 9년으로 완화함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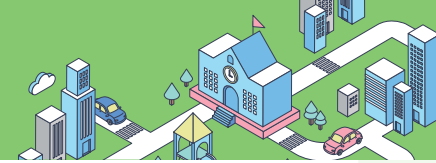
청년 등의 구직 활동에 필요한 취업 및 자격취득 요건 중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확대·개선하여 청년들의 취업 준비기간을 단축하고 다양한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



• 실무경력 인정 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대통령령 개정 목록

연번	소관 부처	법령	세부 내용
1	교육부	사립학교법 시행령	· 기금운용심의회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 자격 요건
2		유아교육법 시행령	· 유치원 강사 등 자격
3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과학관 전문직원 자격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연구하는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의 연구전담요원 자격
5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인력의 자격 ·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인력의 자격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정·신고해야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
7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연구인력 자격
8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 범죄피해자보호시설 시설종사자 자격
9		상법 시행령	· 상장회사 외부감사위원회 위원(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자격 · 준법지원인 자격
10	국방부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 국방대학교 교수(기본과정 및 특별과정 교육 전담 교수) 자격
11	국방부, 방위사업청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 전문인력 자격
12	문화체육 관광부	공연법 시행령	·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 전담기관 업무책임자·직원 자격 · 무대시설 안전진단기관 기술인력 자격
13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 국제문화교류 진흥업무 전담기관 전문인력 자격
14	농림축산 식품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기관 상시 고용인력 자격
15	산업통상 자원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 도시가스사업자 등이 선임해야하는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16		부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부리산업진흥센터 전문인력 자격

연번	소관 부처	법령	세부 내용
17	환경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 기술인력 자격
18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전문인력 자격
19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환경영향평가사 응시 자격
20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연구위원 자격
21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측량기술자 중 기능사 자격 · 성능검사대행자 기술인력 자격
2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민간위원 자격
23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 준법감시인 자격
24	해양수산부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 외부감사위원 자격 · 준법감시인 자격 · 중앙회 감사위원 자격
25	중소벤처 기업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도사양성과정 수강자 자격
2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자격 · 창업기획자 상근 전문인력 자격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상근 전문인력 자격 · 공모벤처투자조합 등록 전문인력 자격
27		방위사업법 시행령	· 군수품 구매절차 협상참여 민간전문가 자격
2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목재등급평가사 자격
29	산림청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산림교육심의위원회 전문위원 자격
3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산림경영지도원 자격
31		산림조합법 시행령	· 산림조합중앙회 외부 전문가 감사위원 자격
32	기상청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 기상사업(기상컨설팅업) 종사인력 자격 · 기상정보지원기관 종사인력 자격



• 실무경력 인정 범위 확대 등을 위한 28개 총리령·부령 개정 목록

연번	소관 부처	법령	세부 내용
1	교육부	진로교육법 시행규칙	· 국가진로교육센터 상근인력 자격
2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의 연구전담요원 자격
3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 우주환경 감시기관 종사자 자격
4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한 인증기관 전문가심사원 등 자격
5	법무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관 자격
6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피부착자 치료기관의 치료 또는 교정프로그램 담당자 자격
7	경찰청	경비업법 시행규칙	· 특수경비원 교육기관 강사 자격
8	소방청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소방기술자의 기술등급 자격
9	행정안전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 방재기술 개발사업 협약체결 대상기관 연구 전담요원 자격
10	농림축산 식품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우수관리인증기관 심사업무 수행자 자격 ·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업무담당자 자격 · 농산물 검정기관 검정인력 자격
1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전문인력 자격
12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해외자원개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업무 시행기관 연구인력 자격
13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강사 자격
14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위탁수행자 기술인력 자격

연번	소관 부처	법령	세부 내용
15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교수요원 자격
1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자격
1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교수인력 자격
18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19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 중앙치매센터 종사자(센터장, 부센터장, 팀장) 자격
20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기술인력 자격
2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기술관리인 자격
22	국토교통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체결 대상기관 상주인력 자격
23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시행규칙	·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평가 평가대행자 기술인력 자격
24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 운전 및 관제적성검사기관 검사인력 자격 · 운전교육훈련기관 교수 자격 · 관제교육훈련기관 교수 자격 · 철도안전 전문기관 기술인력 자격
25	해양수산부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 대상자 자격
26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등의 시험·검사인력 자격 · 수입식품 등 국외시험·검사기관 시험·검사인력 자격
27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관련 품질책임자 자격
28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 의약품의 제조관리자 자격



70

개인정보 침해개선 법령정비



추진 배경

-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보건·교육·금융 분야 등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협업 법령정비 과제)



개선내용



개인정보 침해개선 법령정비 주요 사례

(유형 1) 건강정보 범죄경력자료 등 민감정보 처리 사무 제외(「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현재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에 관한 사무 등 영양 관련 모든 사무에 대해 건강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

개선

건강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무 중 영양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 신고에 관한 사무는 제외

☞ 국민의 민감정보인 건강정보를 처리·관리 할 수 있는 사무를 명확히 규정



개선내용

(유형 2) 개인정보 사무처리의 목적을 구체화(「교육시설법 시행령」, 교육부)

현재

교육시설 분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

개선

전문기관 지정 시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의 보유 상황을 확인하는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처리

☞ 개인정보를 처리·활용하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오남용 방지

(유형 3) 개인정보 관련 자료제출 간소화(「과학기술유공자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재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심사를 신청하는 사람 등은 지정 후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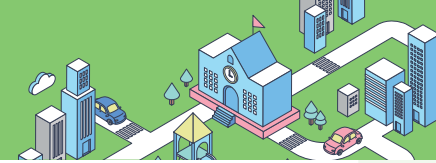
지정심사 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처리될 수 있도록 후보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제출

☞ 공공기관 등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자료를 간소화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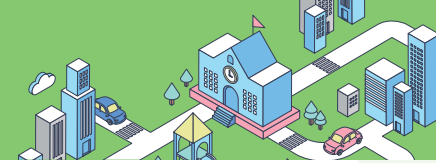
행정기관 등에서 관리 중인 개인정보가 목적 이외로 사용·처리될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령 일괄 정비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대통령령 개정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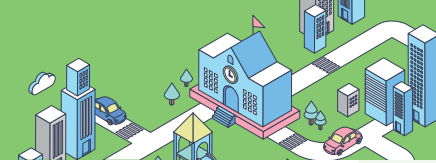
연번	법령명 및 조문		개정사항	소관 부처
1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건강정보 처리사무 명확화	보건복지부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	건강정보 및 범죄경력자료 처리사무 명확화	식품의약품 안전처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의2	개인정보 처리 불필요 사무 삭제	국토교통부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의2	개인정보 처리 불필요 사무 삭제	국토교통부
5	검역법 시행령	제8조	건강정보 처리사무 명확화	질병관리청
6	경비업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강정보 및 범죄경력자료 처리사무 명확화	경찰청
7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범죄경력자료 처리사무 명확화	중소벤처 기업부
8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4조	개인정보 처리 사무 목적 구체화	경찰청
9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51조	개인정보 처리 사무 목적 구체화	경찰청
10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6조	개인정보 처리 불필요 사무 삭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축소	경찰청
11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과도한 개인정보 제출 서류 간소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12	교육공무원임용령	제23조의2	개인정보 처리 사무 목적 구체화	교육부
13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개인정보 처리 사무 목적 구체화	교육부
14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	건강정보 처리사무 명확화	보건복지부

연번	법령명 및 조문		개정사항	소관 부처
15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3조의4	처리하는 개인정보 명칭 현행화	금융위원회
16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범죄경력자료 처리사무 명확화	금융위원회
1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명칭 현행화	금융위원회
1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6조	개인정보 처리 불필요 사무 삭제	국토교통부
19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7조	개인정보 처리 불필요 사무 삭제 건강정보 및 범죄경력자료 처리사무 명확화	보건복지부
20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7조의3	개인정보 처리 불필요 사무 삭제 건강정보 및 범죄경력자료 처리사무 명확화	경찰청
2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2	건강정보 및 범죄경력자료 처리사무 명확화	식품의약품 안전처
2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축소	중소벤처 기업부
2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개인정보 처리 불필요 사무 삭제 건강정보 및 범죄경력자료 처리사무 명확화	경찰청
24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16조	개인정보 처리 불필요 사무 삭제	경찰청
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의2	건강정보 및 범죄경력자료 처리사무 명확화	고용노동부
26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6조의2	범죄경력자료 처리사무 명확화	금융위원회
27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2	범죄경력자료 처리사무 명확화	해양경찰청



연번	법령명 및 조문	개정사항	소관 부처
28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건강정보 및 범죄경력자료 처리사무 명확화	식품의약품 안전처
29	약사법 시행령 제38조의2	건강정보 및 범죄경력자료 처리사무 명확화	보건복지부
30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축소	중소벤처 기업부
3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범죄경력자료 처리사무 명확화 처리하는 개인정보 명칭 현행화	금융위원회
32	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3조의3	건강정보 처리사무 명확화	식품의약품 안전처
33	의료기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개인정보 처리 불필요 사무 삭제	보건복지부
34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제19조	건강정보 처리사무 명확화	식품의약품 안전처
35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5조	개인정보 처리 불필요 사무 삭제	교육부
3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7조의2	범죄경력자료 처리사무 명확화 처리하는 개인정보 명칭 현행화	금융위원회
3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개인정보 처리 불필요 사무 삭제	보건복지부
3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2	유전정보 및 범죄경력자료 처리사무 명확화	보건복지부
39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1조	개인정보 처리 불필요 사무 삭제	금융위원회
40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3	과도한 개인정보 제출 서류 간소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연번	법령명 및 조문	개정사항	소관 부처
41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7조	개인정보 처리 불필요 사무 삭제	국토교통부
4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축소	중소벤처 기업부
4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건강정보 및 범죄경력자료 처리사무 명확화	보건복지부
44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4조	범죄경력자료 처리사무 명확화	식품의약품 안전처
45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의2	건강정보 및 범죄경력자료 처리사무 명확화	경찰청
46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명칭 현행화	금융위원회
47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개인정보 처리 불필요 사무 삭제	보건복지부
48	화장품법 시행령 제15조	건강정보 및 범죄경력자료 처리사무 명확화	식품의약품 안전처
49	환자안전법 시행령 제10조	개인정보 처리 불필요 사무 삭제	보건복지부



71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



추진 배경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
 - 소상공인이 자력으로 완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측면에서의 지원* 필요
* (국정과제 01-3)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
- 특히, 소상공인의 법령 위반행위에 고의·중과실 없는 경우 행정청이 유연하게 제재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법령정비를 추진, 소상공인의 재기 적극 지원



개선내용

- 제재처분 감경사유에 소상공인을 추가
 - 위반행위의 횟수, 행위의 중대성, 위반상태 해소 노력 여부 등 현행 제재처분 감경 사유에 위반행위자가 고의·중과실 없는 소상공인인 경우를 추가
- 제재처분의 최대 감경범위를 최대 70퍼센트까지 확대
 - 위반행위자가 고의·중과실 없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최대 감경범위를 70퍼센트까지 감경범위 확대
- 등록취소·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감경규정 신설
 - 등록취소·허가취소 처분의 경우에도 영업정지 등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근거를 신설하고, 고의·중과실 없는 소상공인의 경우 70퍼센트까지 감경범위 확대



소상공인 제재처분 정비 주요 사례

(유형 1) 가축분뇨처리업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감경기준에 소상공인 추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현재

위반행위의 횟수, 경미한 정도, 사소한 부주의·오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하여 부과하도록 규정

개선

고의·중과실 없는 위반행위 자가 소상공인인 경우, 위반행위자의 현실적 부담능력·경제위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사유 신설

※ 소상공인인을 제재처분 감경사유에 추가, 제재처분 감경 적용 독려



개선내용

(유형 2) 전력시설물 설계업자·감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감경기준 확대(50% → 70%)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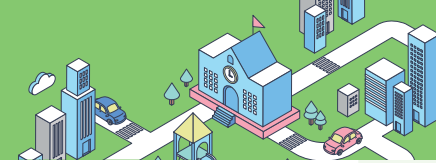
현재

전력시설물 설계업자·감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과태료 감경부과 허용

개선

고의·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 부담능력·경제위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70퍼센트 범위까지 과태료 감경부과 허용

※ 소상공인의 영업 환경에 따라 확대된 감경기준을 적용, 경제적 부담 완화



72

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법령정비

(유형 3)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의 감경규정 신설(「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개선내용

현재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중 영업정지에 한해서만 처분의 감경을 허용



개선
등록취소 처분에 대해서도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 + 고의·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취소 처분을 3개월의 영업정지로 감경(영업정지 처분은 70퍼센트 범위까지 감경) 허용

※ 등록취소·허가취소 처분의 경우에도 감경이 가능하도록 하여 처분의 개별·구체적 타당성 확보



기대효과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물가상승 및 경기둔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 및 경영부담을 완화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추진 배경

•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의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022. 1. 13. 시행) 됨에 따라, 자치입법권을 제한하고 있는 법령 정비 필요

* 제28조(조례)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 111-2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 제약 법령 정비)



자치입법권 강화 정비 주요 사례

(유형 1) 공설장례식장 등 운영 수탁기관을 조례로 정하도록 시행령 규정 삭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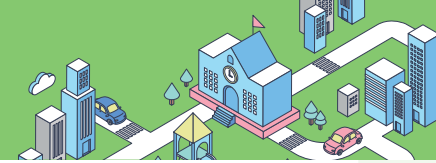
개선내용

현재
공설장례식장 운영 수탁기관의 지정 기준을 시행령에서 규정



개선
공설장례식장 운영 수탁기관을 지역 특성에 맞게 조례로 규정

※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내용과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제한하지 않도록 개선



(유형 2) 친어 등의 대여 및 교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시행규칙 규정 삭제(「수산
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현재 지자체장의 친어등의 대여나 교환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규정

개선 지자체장의 친어등의 대여나 교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직접 규정

☞*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직접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하위법령 정비

(유형 3)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추가설치시 협의 주체 변경(「지역보건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현재 지자체에 보건소를 추가 설치하기 위
해 행정안전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
과 협의

개선 보건소를 추가 설치하려는 지자체장
이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

☞* 지방자치단체 직속기관 설치시 협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변경

* 정비 목록 : 11개 대통령령 및 5개 부령(11.1, 11.2. 공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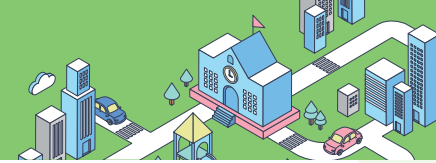
소관부처	정비대상 법령
국방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6조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1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경관법 시행령 제5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건축법 시행규칙 제10조

소관부처	정비대상 법령
문화재청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보건복지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8조
산림청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
해양수산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0조
행정안전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환경부	지하수법 시행령 제20조의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기대효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제정권을 보장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집행 기반 마련



MEMO

MEMO

2022
국민불편 법령정비
사례집

